

일본 오염수 파문에도...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유명무실'

광주일보 취재진 30여곳에 주문해보니

광주·전남 배달음식업체들이 원산지표시 의무화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다핵종저해성비(ALPS)의 배관을 청소하던 중 오염수가 배출됐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식자재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업체주인들은 이조차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배달음식 업소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곳에 달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광주·전남에서 이를 어긴 업체가 수십곳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배달음식업체 중 37곳이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지난 2021년에는 57곳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35곳이 적발됐지만 배달업체 중 대부분의 음식점은 아직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나주·목포 등지에서 배달앱을 통해 30여 곳의 음식점에서 회, 초밥, 치킨, 제육볶음 등 배달음식을 시킨 결과 단 2곳의 음식점에서만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했다.

주문한 30여곳 중 2곳만 표기 업체 "영수증 원산지 표기 몰라" 의무화 3년 됐지만 지켜지지 않아 광주·전남 을 위반업체 30곳 적발 지역민들 식자재 불안감 커져

현행법상 배달음식일지라도 농산물 3종(쌀·배추·감자·콩), 축산물 6종(돼지·소·닭·오리·양·염소), 수산물 15종(병태·고등어·갈치·오징어 등) 등 총 24개 품목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는 음식을 포장한 포장재 또는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업주들이 배달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42)씨는 "식당 내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모두 표시했는데 배달음식 영수증까지 모두 표시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배달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모르는 업주도 있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제육볶음 음식점을 운영하는 B(여·38)씨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주문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배달앱에 원산지를 모두 표기해서 안심하고 있었다"며 "포장재나 영수증까지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시 과태료 등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배달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 위주의 행정보다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관계자는 "주로 영세 업체에서 배달앱 상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접 받아보는 영수증,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배달앱을 포함한 음식점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품위생 교육과 연계해 원산지 표시 교육,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글·사진: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배달음식 업체 5곳의 영수증 중 한곳(가운데 점선)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도와주마”... 135억 가로챈 일당 적발

가짜 프로그램 설치 유도해 갈취 광주서부경찰, 15명 검찰 송치

'해외주식 투자'를 도와준다는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A(37)씨 등 10명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짧은 공범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주식 매매 프로그램)를 이용해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의 한 주식투자 사기 피해자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추적하던 중 A씨 등의 사기 행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주가를 보여주

고, 투자금을 넘겨받아 나스닥·항생 등 해외선물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투자한 종목이 실제로 손해를 봤을 경우 일당은 그 손실금 만큼을 나눠 가졌다. 피해자에게는 위로금 등을 지급해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했다.

반면 투자 종목에서 이익을 봤을 경우, 피해자에게 "부정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위협해 원금만 돌려준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운영팀장, 운영팀 직원 등 3명에서 투자 사기를 하기로 공모했으며, 고향

친구와 지인 등을 동원해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으로, 각 피해자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억여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자기 실수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여겨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 135억원 중 순수익으로 추정되는 21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고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통장 입출금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학교 코치가 제자 성폭행” 고소장 접수

광주북부경찰, 입건 조사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은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30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

사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A씨의 제자인 10대 운동부 여학생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간첩 이창용·손성모 사건, 5·18과 무관”

5·18진상조사위 진실 규명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간첩이 투입됐다는 근거로 쓰인 간첩 사건이 5·18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980년 검거된 '간첩 이창용(본명 홍중수) 사건'과 1981년 검거된 '간첩 손성모 사건'은 5·18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규명 결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창용은 5·18 직전인 1980년 5월 초에 보성군으로 침투했다가 같은 달 23일 서울역에서 주민 신고로 검거된 간첩이다. 당시 서울시 경찰국은 이창용을 '광주 시위 선동 납파 간첩'으로 발표해 '5·18 북한군 침투설'에 불을 붙였다.

이창용은 단선된 고정 간첩망 복구와 지하당 구축 임무 등을 띠고 남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창용을 검거했던 당시 독침 엠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혀를 깨물어 혼절하는 등 수사가 불가능 했음에도 검거 다음 날인 5월 24일 공장 '광주 시위 선동 납파 간첩'으로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성모는 1980년 5월 4일 해남군으로 침투한 뒤 전국의 사찰을 전전하다가 1981년 2월 15일 주민 신고로 경북 문경 해국사에서 검거됐다. 손성모는 한 북한이탈주민 작가가 쓴 책자를 통해 '승려로 위장 침투해 5·18 당시 무등산 중심사에서 북한특수군을 지휘'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조사 결과 손성모는 5·18 기간 동안 무등산이 아닌 전북 남원시 서진암에 있었으며, 이후 경찰의 검문을 피해 경북 문경 해국사가 전국적인 사찰 등 정보를 수집하다가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약 혐의 전우원씨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전우원의 손자 전우원(27)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판

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